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6/ 15 통권 1575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변화를 꾀한다(4)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법인이 대주주 보유주식을 자기주식 취득시 세금  
과 회계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품이나 시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로 방문 신고 납세자 44% 감소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는 적용 안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창업시 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명의 환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개념, 구분	현재 시점의 주식양도신고	과거 시점의 차명 · 증여신고
발생 경우	누적잉여금이 적어 주식 양도소득 적은 경우	누적잉여금이 커서 양도소득이 큰 경우
액면가 1천만원 평가액 1억원 (중소기업, 소액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명 5년 후 양도방식 환원거래</li> <li>· 양도소득 1억 - 1천만원 - 250만원 = 8750만원 <math>\times 10\% \times 11 = 962.5</math>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세 1천만원 <math>\times 10\% = 100</math>만원</li> <li>· 무신고가산세 20% + 미납부가가산세 11% <math>\times 5</math>년 = 75%</li> <li>· 세금 100 <math>\times (1+75\%) = 175</math>만원</li> <li>· 현재의 양도소득이 커서, 과거의 차명신고납부가 유리</li> </ul>
액면가 3천만원 평가액 5천만원 (중소기업, 대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 : 5천 - 3천 - 250만 = 1750만원 <math>\times 20\% \times 11 = 385</math>만원</li> <li>· 이익 적고 주당평가액도 낮아 현재 양도소득이 과거 증여세보다 적으므로, 현재 기준의 양도가 유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명 5년, 3천만원 <math>\times 10\% = 300</math>만원</li> <li>· 가산세를 합 75%</li> <li>· 세금합계 300 <math>\times (1+75\%) = 525</math>만원</li> </ul>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시 합류직원 이름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 설립하고, 5년 지난 후 명의를 창업자 본인에게 환원시, 과거 차명의 증여세 + 5년 가산세 신고방법과 현재의 주식양도신고방법은 상황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음.</li> <li>· 차명금액, 지분비율, 현재평가액(=누적이익), 적용세율 구간(10%-50%)에 따라 차명증여세신고와 현재 양도세신고의 유리·불리가 다양한 상황임.</li> <li>· 방법 : 청년창업, 법인 설립시 차명하지 않고 실질대리가 현명함.</li> </ul>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75호 / 주간 24호

2022. 6. 15.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예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창업시 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명의 환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법인이 대주주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시 세금과 회계	2
C E O 에 세 이	CEO는 변화를 꾀한다(4)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발주사의 loss 금액 차감 입금 관련 분개문의 - 송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처리 - 선급금 세금계산서와 여음할인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 일용직 근로자 적격증빙 관련 문의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주택임대소득 과세 - 주요 세제개편 방향	9 10
직 장 인 Survival	빈잔의 여유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합증평가 대상임 (기준법령재산-143, 2021.09.17) - 사업자가 체력단련장과 스파업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1558, 2021.11.08)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실질적 소유자도 대상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는 적용 안됨	12
세 무 정 보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로 방문 신고 납세자 44% 감소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15 29 34
회 계 정 보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44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3

# 법인이 대주주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시 세금과 회계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사례 : 불입자본액면가 10억원의 10%를 6배인 6억원에 취득하는 경우임.

개념, 구분	자기주식 취득 후 보유		자기주식 취득하여 소각, 감자	
목적, 의도	대주주의 요청에 따른 자기주식취득과 일시보유 후 주가관리 또는 외부 매각		일부 대주주에게 일정이익을 배당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취득 후 자본감소 감자 (의제배당임)	
회계처리 반영	(차) 자기주식 6억 (대) 현금 6억		(차) 자본금 1억원 (대) 현금 6억원 잉여금 5억원	
재무제표의 자본계정 표시	불입자본금 10억원 - 자기주식 6억원 (자본조정) 순자기자본 4억원	이익잉여금 60억원 은 그대로 유지됨	불입자본금 10억원 - 자본금 1억원 자기자본 9억원	이익잉여금 60억원 - 배당금액 5억원 이월잉여금 55억원
과세방법	대주주의 주식양도이익으로 과세 양도가 6억 - 불입원가 1억 = 양도차익 5억 $5\text{억} \times 22\% = 1.1\text{억원}$ ㉞		대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 감자 총지급액 6억 - 불입원가 1억 = 배당소득 5억의 종합소득세율 적용 = 최소 1.92억원 ㉞	
자기주식 최종 양도	(차) 현금 7억원 (대) 자기주식 6억원 자기주식 매각익 1억원		해당없음(이미 감자처리하여 없어짐)	
향후 추가 과세	자기주식 보유하다가 감자하면 최종 배당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1.92억원 ㉞ - 선납주식양도세 1.1억 ㉞ = 추가납부액 0.82억원 + 가산세금		이미 배당종합소득으로 고율과세종결됨	

## CEO는 변화를 꾀한다(4)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시민단체 인사들 상당수가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아이덴티티(identity)에 대해 논란이 많다. 여하간 시민단체는 정치를 비롯하여 기업과 각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 역시 서울대 명예교수 학현(學峴)변형운 선생님을 모시고 십여년간 경실련 초대기업평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존경받는 기업’을 격려해왔다. 시장(市場)전문가인 동시에 시민단체 벌론티어(Volunteer)로서 시민참여 정치에 대해 남 못지 않게 주의할 점을 알면서도 여러모로 깊이 이해한다. 선진국 기업도 오래 전부터 시민 운동가들과 함께 해 왔다. 함께 해왔다는 것은 기업이 시민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계기로 만들어 성장발전해 왔다는 뜻이다.

### 시민운동과 함께 해야

미국경제가 세계2차대전 이후 최고 호황기를 구가하던 1965년. 미국 자동차업계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하버드대를 갓 졸업한 30대 변호사인 랄프 네이더가 펴낸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Unsafe at Any Speed)’라는 책 때문이었다. 미국승용차들의 성능과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책이었다. GM은 그를 매장기 위해 사설탐정을 동원해 뒷조사를 감행했다. 온갖 회유와 협박도 모자라 미인계까지 동원하는 치졸한 수법까지 썼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네이더는 더욱 스타가 되었다.

‘다윗’ 네이더는 ‘골리앗’ GM과 2년간 법정투쟁을 했다. 다윗은 결국 미국의회가 1966년 자동차 리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도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네이더는 GM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 GM을 비롯하여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그 후 더욱 소비자들 입장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 네이더는 ‘성인 네이더’라고 불릴만큼 청렴결

백한 금욕주의자였다. 또 그는 시민운동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치 않는다. 물론 그는 지난 92년(무소속 후보)과 96년(녹색당 후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뜻은 다른데 있었다. 선거라는 정치마당을 통해 시민운동의 선전장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낙선 되기 위해 공직에 출마한 것이다.

## 하이브리드 경영을 피해야

카드 한 장이 신용카드 기능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 카드 노릇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을 하이브리드(Hybrid)라고 한다. 하이브리드는 혼용, 잡종 등으로 번역된다. 잡종시켜 생육시킨 생물은 생산성이 좋거나 내병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도 타대학 출신 총장을 선임하여 대학 발전을 꾀한다. 기업도 자기들만의 순혈주의를 버려야 강해진다. H그룹출신 경영자가 S그룹의 CEO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조화를 꾀하는 것도 대세다.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는 산학 협동은 다반사다. 또 관료가 경영자로 영입되고 경영자가 장관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인사들이 정부에 진출하는 것처럼 이제 기업도 시민사회 인사들과 교류를 해야 한다.

서로 이해를 증진시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일테면 사외이사로 시민단체인사들을 영입하여 투명경영을 가속화하면서 신뢰를 획득하는 게 좋다. 바로 하이브리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세상은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인 즉 정부기구 GO(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인 시민단체 그리고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발주사의 loss 금액 차감 입금 관련 분개문의

**Q** 당사는 물류업체로서 발주사(화주)에게 화물주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주사가 사전 고지 없이 배송기사 패널티(작년 하반기 ~1월 발생)를 사유로 대금을 일부 차감한 후 지불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당사는 도급사에게 해당 금액을 공제한 다음 입금할 예정입니다.

**Q.** 해당 내역을 매출인식시 어떻게 반영하여 분개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 내역 관련하여 도급사와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라 매출액을 그대로 두고 발주사의 외상매출금을 그대로 상계하면서 loss금액만큼 도급사의 외상매입금을 차감하여 기장하였습니다.

**A** 발주사가 귀사에게 지급할 대금의 일부를 서비스의 불만족에 따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일종의 배상이나 보상성격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처리

**Q**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감가상각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설치비 5천만원. 기존 건물: 내용년수 40년중 잔존 내용년수 15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라 자산항목을 건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구축물 또는 집기비품 건물로 회계처리시 건물의 내용년수가 40년이 되나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는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4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1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A**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구축물 등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건축물이 아닌 별도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 선급금 세금계산서와 어음할인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Q**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수정을 합의 없이 진행하여,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아래와 같이 문의를 남깁니다.(저희는 매입업체 입장입니다)  
"제작 납품 계약을 진행하며 선급금 30%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선급금 적요 때문에 어음할인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적요상 선급금 부분을 삭제하고 재발행할 것을 권하더군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적요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합니다."  
1)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은 법적으로 할인이 불가하다'는 은행의 판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업체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였는데, 매입업체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A** 1.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의 법적할인 관련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융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 대해 매입자(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에게 재수정 요구 등의 이외에 별도의 세법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적격증빙 관련 문의

**Q**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에 회사 측에서 적격증빙에 기재해야 할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포함한 금액인가요?

**A**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며, 세금포함한 총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업자마다 고객확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있게 마련이다. 보통 고객유치를 위해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 재화의 사업상 증여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는 공급대가가 수반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급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즉, 간주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증정하는 "사업상의 증여"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은 재화를 증여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수증자(사은품이나 경품수령자)는 세금부담없이 사은품이나 경품을 사용소비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증자로부터 재화의 대가는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수증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사용·소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판매촉진상 재화의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을 별도로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통 사업자가 자기예산으로 납부하고,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의 부대비용으로 하여 비용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 등의 간주공급 등의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사업상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업자가 구입한 재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이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되는 재화(사은품이나 경품 등)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예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사은품 등에 대해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품 등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356, 2000. 2. 9).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서 사업상의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광고선전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사은품이나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은품이나 경품은 수령자의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보통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은품의 경우 계속적 거래, 구매, 판매량 등의 마일리지 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이미 판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소득 46011-21044, 2000. 7. 26). 그러나 사은품이라도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제도 46012-12338, 2001. 7. 24).

역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득 46011-21019, 2000. 7. 22).

즉,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반면에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은품이나 추첨을 통한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으로서 사업자가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주택임대소득 과세

보유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 대상	
	월세 수입	보증금 · 전세금
1주택	아래 주택만 과세 - 국외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국내주택	과세 안 함
2주택	모든 주택 과세	과세 안 함
3주택 이상	모든 주택 과세	아래에 동시 해당하면 과세 - 비(非) 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임대소득 과세 세율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2주택자	3주택자
1,200만원 이하	6%	26%	36%
4,600만원 이하	15%	35%	45%
8,800만원 이하	24%	44%	54%
1.5억 이하	35%	55%	65%
3억 이하	38%	58%	68%



## 새정부 주요 세제개편 방향

종합부동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 유지 검토</li> <li>-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 아닌 11억원으로 적용, 연령·보유 공제 최대 80% 적용 등 위해 종부세법 개정 추진</li> <li>- 상속주택 비롯 저가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li> </ul>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환원 검토</li> <li>-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검토</li> <li>- 유턴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 확대 검토</li> </ul>
상속·증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세 10억원 초과 재산도 공제되도록 법 개정 검토</li> <li>-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인 무상증여 상한 높이는 방안 검토</li> </ul>



## 5대 은행 예금 금리 현황

은행	상품명	기본금리 (단리이자 %)		최고우대금리 (단리이자 %)	
		6개월	12개월	6개월	12개월
NH농협	NH왈츠희전예금	1.87	2.29	1.97	2.39
KB국민	KB star 정기예금	1.97	2.24	1.97	2.24
신한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		2.15		2.3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		2.05		2.05
NH농협	e-금리우대 예금		1.95		2.35
우리	우리 SUPER정기예금	1.75	1.9	1.75	1.9
KB국민	KB Green Wave 1.5°C 정기예금		1.85		2.3
	KB 더블모아 예금		1.85		2.55
NH농협	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		1.85		2.25
신한	신한 S드림 정기예금	1.6	1.85	1.6	1.85



## 빈잔의 여유

잔은 비울수록 여유가 있다

그것이 술이라도 좋고 세월이라도 좋고 정이라도 좋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조급함을 버리고 그리고 집착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잔은 채울 때보다 비울 때가 더 아름답다.

빈 잔의 자유를 보라.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그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무언가에 자꾸만 집착이 갈 때,

삶이 허무하고 불안하여 믿음이 가지 않을 때

빈 잔을 보라.

가슴이 뭉개어질 때까지 보라.

비우는 잔마다 채워질 것이다.

투명한 것을 담으면 투명하게 보일 것ियो.

따뜻한 것을 담으면 따뜻한 잔이 될 것이다.

# 최 신 판 례 예 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기준법령재산-143, 2021.09.17

## 질 의

-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19.12.16. 사주일가는 A법인 및 B법인 사업부문 주식을 C법인에 현물출자하고 C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음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현물출자한 주식이 할증평가 적용배제 대상인지

## 회 신

과세기존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는 적용 안됨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전자세원-5210, 2021.08.13

## 질 의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음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1558, 2021.11.08

## 질 의

- 신청법인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 2~3층에서 체력 단련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10.2. 같은 건물 1층에서 스피닝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층에서는 스피닝사업, 2~3층에서는 체력단련장 사업을 영위하였음
  - 신청법인은 사업부진으로 '21.8.31. 임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기존 회원 선수금 환불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 '21.10.13.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양수인")과 2~3층 체력단련장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본건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양수인이 잔금 지급 시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신청법인과 건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양수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약정함
- 질의내용
- 구분 등기된 2개의 상가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직원 전원 퇴사처리 및 고객 선수금 환불 후 한 사업장의 사업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 【 회 신 】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서면법인-2878, 2021.11.11

#### 【 질 의 】

- 질의법인은 조합원(5명) 및 인근 어민 등이 양식한 전복을 수매 보관하여 유통 및 판매하고 있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 질의

- 조합원 외의 어업인 및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 실질적 소유자도 대상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까지 세무서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정보는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내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 측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코로나 산발 피해 시 기한연장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의 증여세 대상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및 동해 산발 피해 등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예상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 안내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피해자 등이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세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 100채 상속받아도 1주택 행세… 정부,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걸지 않 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셈이라서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제외기간, 적용 주택 수, 적용주택 가격, 적용주택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에 대해 “오는 7월 말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까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상속주택 등 종부세 주택 수 제외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둘러 체납 정리 하세요”…관세청,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관세청이 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2. 6

- ☐ (신고개요)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 \*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 ☐ (신고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 ☐ (신고검증)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1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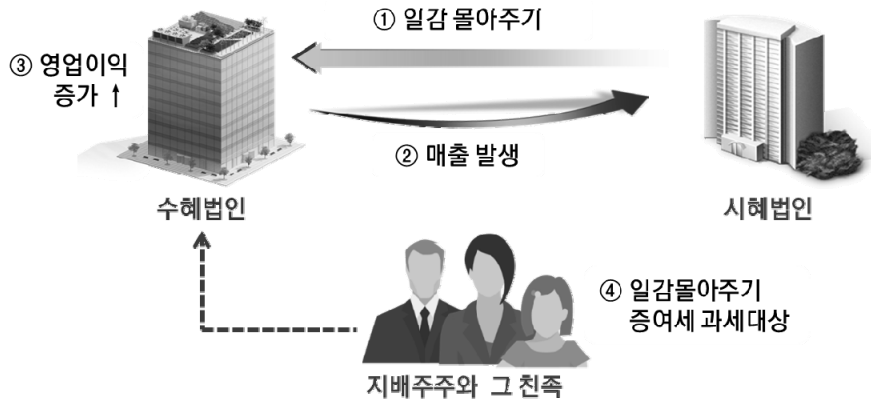


-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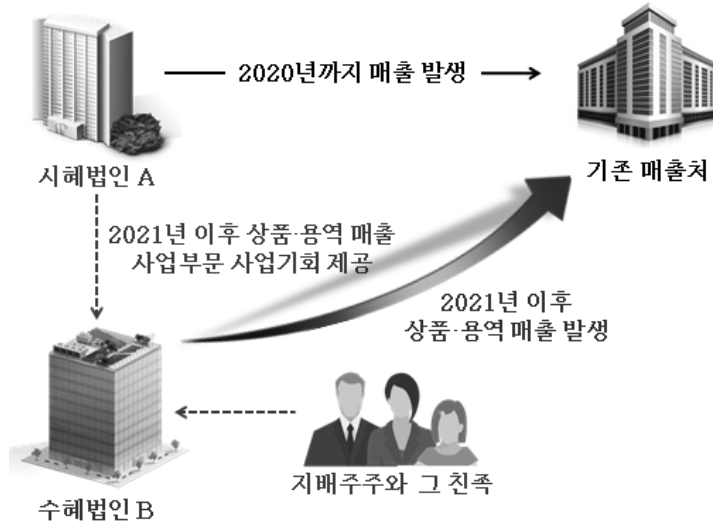
-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6. 30.(목)\*까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고기한) 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 ·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 3】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1,739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하여 지배주주 등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3

**코로나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4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서비스 강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2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신고검증)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 [공통사항]

-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 참고 1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sup>1)</sup> (중소기업 50% · 중견기업<sup>2)</sup> 40%)를 초과할 것
  -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 2)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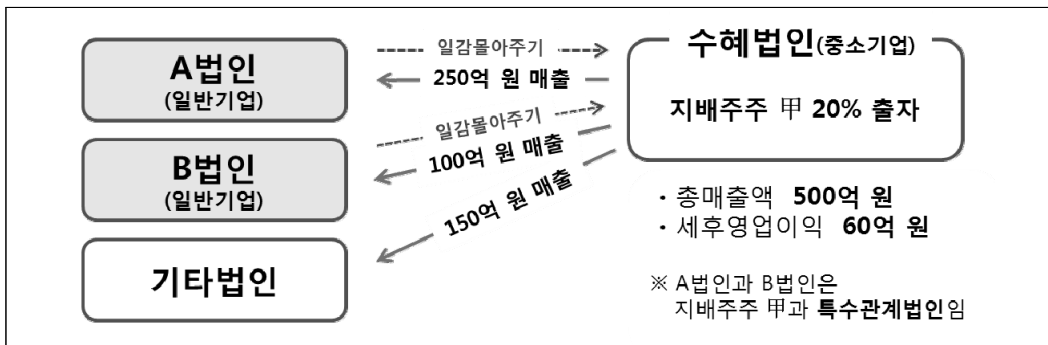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 ○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 원
- 일감물아주기 거래비율: 70% (350억 원/500억 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 원 × (70% - 50%) × (20% - 10%) = 1.2억 원

## □ 용어설명

- 수혜법인: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함
  -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친족: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 참고 2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 □ 과세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 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 ① 개시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 ② 정산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참고 3 -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①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 ②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③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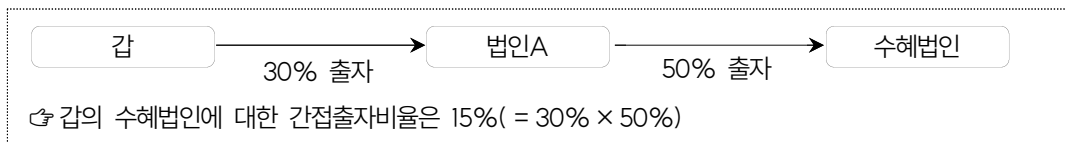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 34의3⑧)

#### | 과세제외매출액 |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③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 ⑥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 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 34의3⑫)

####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⑧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4 -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 ② 출자지분을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③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

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株式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신고 시) |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비율}) - \text{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times 12\} \times 3$

#####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정산 시) |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 ⑤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20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19년부터 '21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5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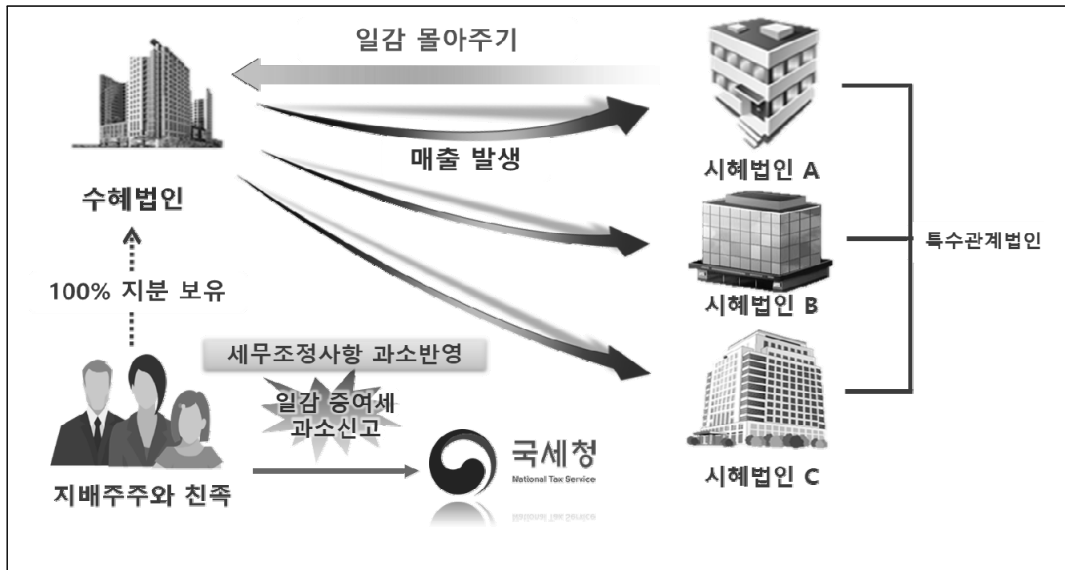
## 사례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시 세무조정 사항 임의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혐의

## □ 인적사항

- 상 호: (주)○○○○ ○ 성 명: ○○○
- 소재지: ○○시

## □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甲, 乙은 시혜법인A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복리후생비 등 세무조정사항을 임의의 숫자로 가감하여 신고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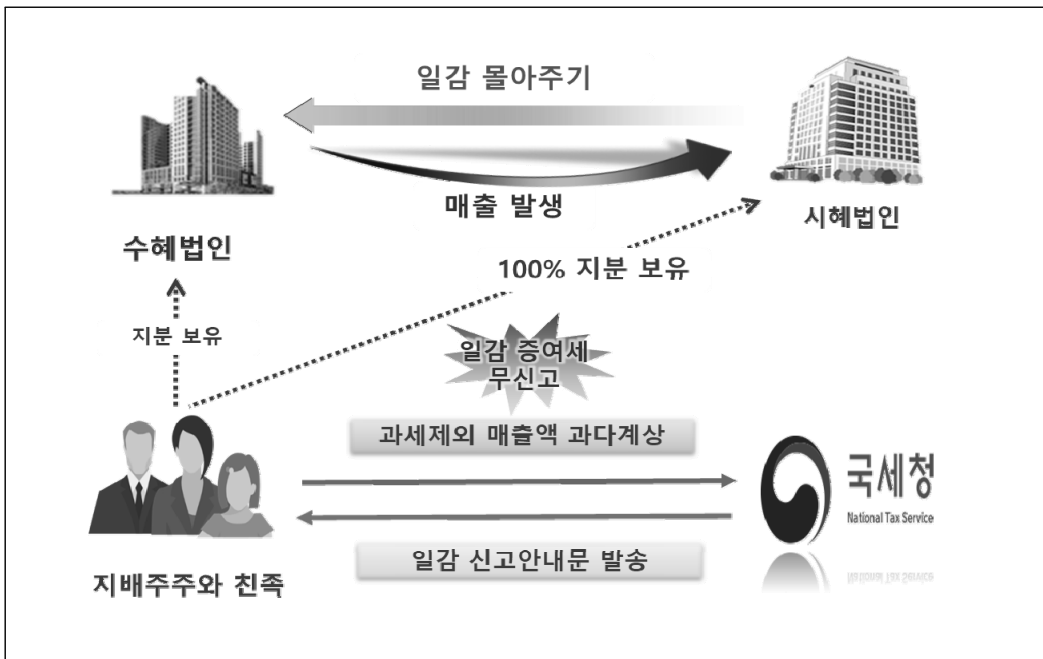
## 사례 2

과세제외매출액 과다계상에 따라 과세미달로 판단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 ☐ 인적사항

- 상 호: (주)○○○○○ ○ 성 명: ○○○
- 소재지: ○○시

### ☐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甲은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수증자1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만 과세제외 해야하나,
- 수증자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합계한 비율로 과다하게 과세제외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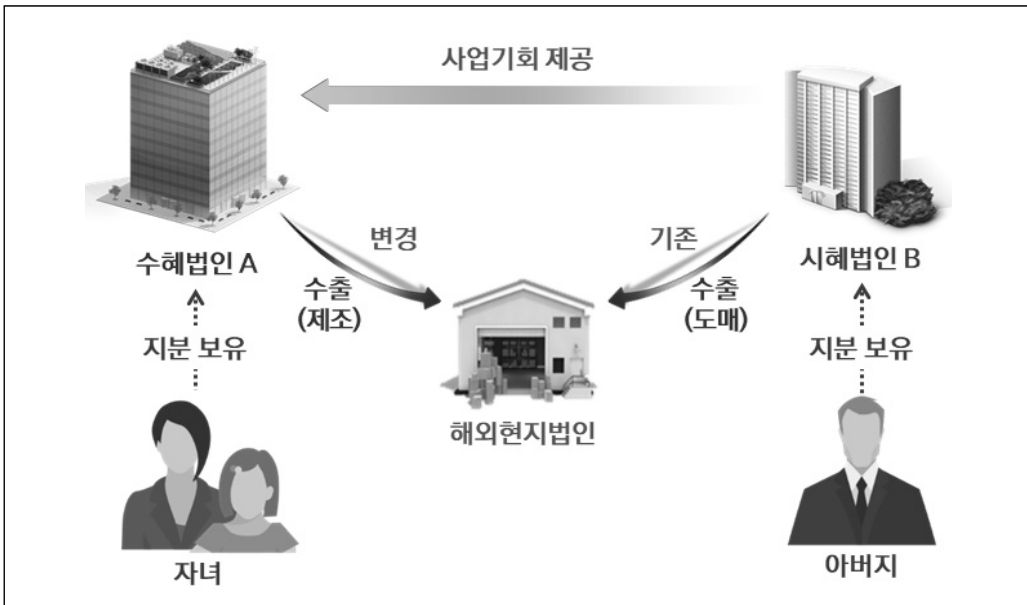


### 사례 3 자녀 소유 법인에 제품수출 관련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

####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성 명 : ○○○
- 소재지 : ○○시

#### □ 주요 적출 사항



-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던 시혜법인B는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A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하여 추가물량은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 □ 조치사항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로 방문 신고 납세자 44% 감소

- 국세청, 2022. 6

- (신고결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신고하여, 2년 전\* 110만 명에 대비해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이 48만 명 감소(44% 감소)하였습니다.
  -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고 지원)
  - 특히, 방문 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 명 감소(41% 감소)하였습니다.
- (감소원인)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190만 명('12) → 491만 명('21)
  - 올해는 특히 국세청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전년 212만 명에서 4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등 간편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고 안내문 개선,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전자신고 안내 숏폼 영상 54편 제공 등 신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두채움·간편신고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IT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

**'22년 종합소득세 방문 신고 결과**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올해 실시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신고하여, 2년 전\* 110만 명에 대비해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이 48만 명 감소(44% 감소)하였습니다.
  -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고 지원)
  - 특히, 방문 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비사업소득자\*\* 인원이 38만 명 감소(41% 감소)하였습니다.
    - \*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참고 1 참조)
    - \*\*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

## 2

**금년도 방문 신고 인원 감소 원인**

-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방문 인원이 급증하였고, 각 세무서 신고창구는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예년과 같은 불편함은 크게 해소되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문화 정착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확대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간편신고 방식 개선, 신고 안내문 개편, 간편환급 및 쏘품 영상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납세자의 전자신고 문화 정착**

-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각 세목별 전자신고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1년 기준으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홈택스 이용자 수도 지난 10여 년간 2.5배 증가하였습니다.
-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세자 스스로 전자신고한 인원도 지난 10년간 2.6배 증가하였습니다.

-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세금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대폭 확대

- 국세청은 각종 지급명세서,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올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지난해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방문 및 전화 문의가 많은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 소득자 등 전체 497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에서 안내하는 내용대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ARS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 원클릭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간편신고 방식 개선

#### [ARS전화 신고 대상 확대]

- ARS전화 신고 대상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비사업소득자까지 확대\*하여 모두채움 대상자는 누구나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참고 2 참조)
- \* (기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사업자 및 종교인만 ARS전화 신고 가능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로 신고하고, 신고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원클릭 신고 도입]

-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들을 위해 원클릭 신고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 안에서 납부할 세액 계산 정보 확인 및 신고 등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 개선

- 모두채움 안내문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에 필요한 정보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세금 신고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자 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개선된 안내문에는 납세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최대한 간략하게 담았으며, 납부(환급)세액, 신고·납부방법 등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부각하여 불필요한 고민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간편환급 도입

-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 국세청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고, 홈택스·손택스·ARS 전화 등을 통해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편환급 서비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숏폼 영상 제공

- 국세청은 올해 총 54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숏폼\*(short form) 영상을 최초 제공하여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자주 묻는 질문 등 납세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①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②공제항목 입력 및 ③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숏폼 영상을 제공하였고,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 3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두채움·간편신고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IT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금액

업 종 별	직전연도	당해연도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미만자	3억 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 원 미만자	1억5천만 원 미만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 원 미만자	7천5백만 원 미만자

① 기존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모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됨

\*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됨

②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하고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발급거부 횟수가 5회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3일(금)	6월 7일(화)	6월 8일(수)	6월 9일(목)
미 달 러 (USD)	1251.20	1241.10	1257.10	1255.40
일 본 엔 (JPY)	963.31	940.19	947.00	934.18
영 국 파 운 드 (GBP)	1573.82	1554.54	1583.44	1574.33
캐 나 다 달 러 (CAD)	995.23	986.57	1003.19	1000.12
홍 콩 달 러 (HKD)	159.49	158.21	160.22	159.97
위 안 화 (CNH)	186.69	187.04	188.40	188.10
유 로 화 (EUR)	1345.04	1327.05	1345.79	1345.66
호 주 달 러 (AUD)	909.31	892.60	908.82	903.07
싱 가 폴 달 러 (SGD)	912.92	901.47	915.05	912.4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95	282.78	286.00	285.71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 국세청, 2022. 6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유형 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47명)
      - \*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 담합 등
    - (유형 ②,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자(42명)
      - \* 고리 수취 불법대부/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생활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원가 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탈세행위는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민생침해 탈세행위의 악영향과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2 조사대상 선정

- 국세청은 경제동향,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정보분석을 통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탈세분야를 점검하여
  -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유형①),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유형②) 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합 계	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② 민생침해 불법행위
89명	47명	42명

### 【민생경제 집중 점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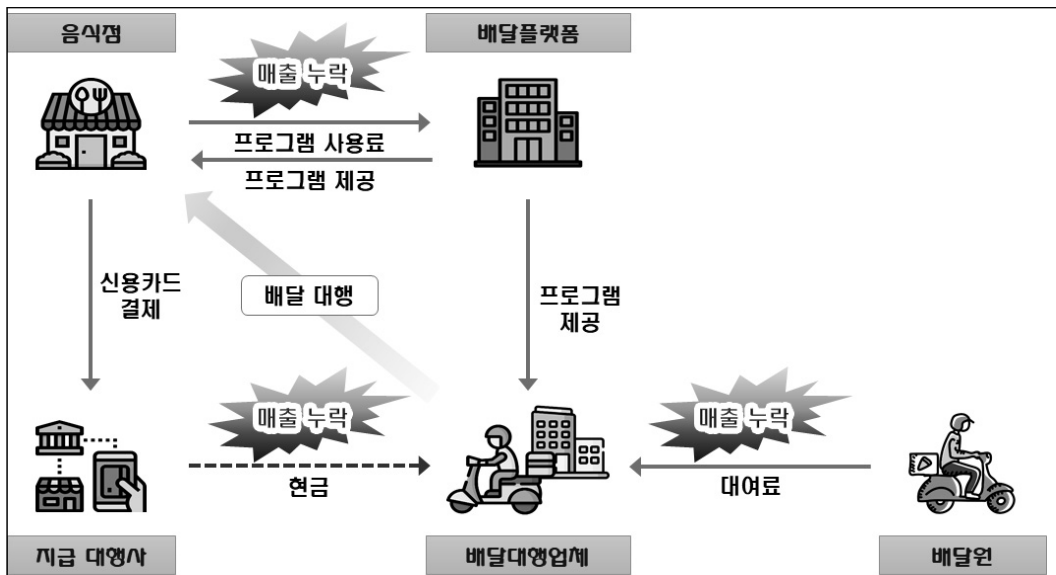
- 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가게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 ② (민생침해 불법행위) 코로나19와 물가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불법행위

## 붙임 1 - 조사 착수사례

사례 1  
(착수)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비와 오토바이 대여료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플랫폼 업체는 프로그램 이용료 매출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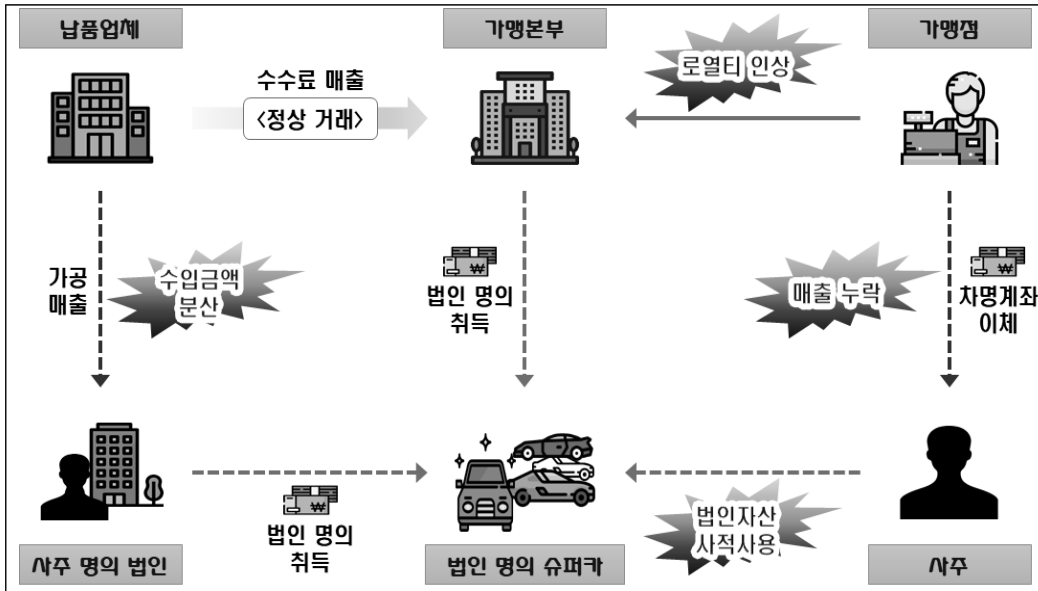
## □ 주요 탈루 혐의

-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한 배달대행업체 □□□는
  -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누락
    - \* (배달료 지급대행)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 누락
  -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
-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

## □ 조사 방향

⇒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업체의 매출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p><b>사례 2</b> (착수)</p>	<p><b>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b></p> <p><b>* 가맹점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납품업체로부터는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본부</b></p>
-----------------------------	--



#### □ 주요 탈루 혐의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은 PPL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리게 되자
  - \* PPL(Product PLacement) : 특정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상품 등을 소도구로 끼워넣는 것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75%) 인상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과 함께,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
  - 또한,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특수관계 결손법인\*의 매출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 수수료 수입보다 결손이 많은 경우 소득금액이 음수(-)가 되어 법인세는 없음
- 사주는 6억 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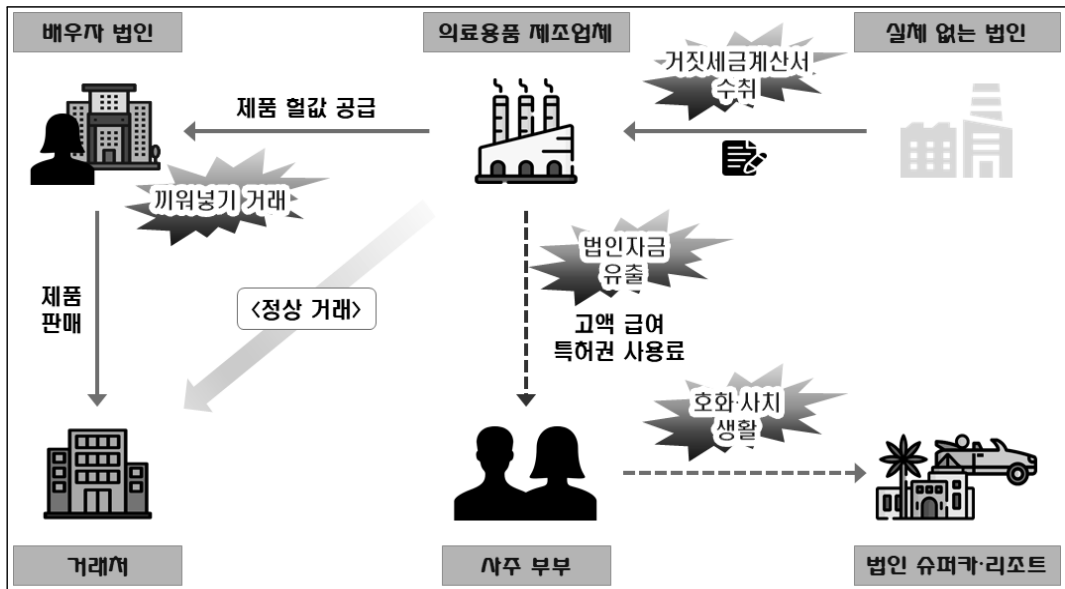
#### □ 조사 방향

⇒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3  
(착수)

사주부부가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호황 의료용품 업체

\* 코로나로 매출이 급증하자 사주부부의 비정상적인 급여로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사주 소유 법인을 거래중간에 끼워넣어 소득을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 의료용품 제조업체 □□□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수백억 원(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함
- 한편,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 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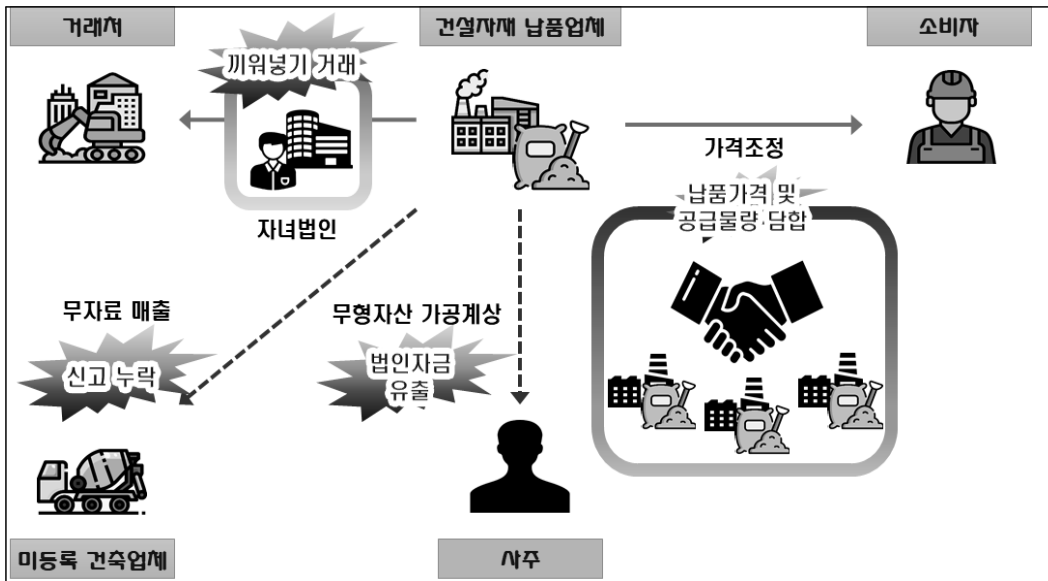
□ 조사 방향

⇨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착수)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 납품가격 및 공급물량을 배분하는 불법담합을 통해 원자재 가격을 인  
상하며 시장질서를 교란



□ 주요 탈루 혐의

- 건설자재업체 □□□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 동종 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음
-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 또한,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조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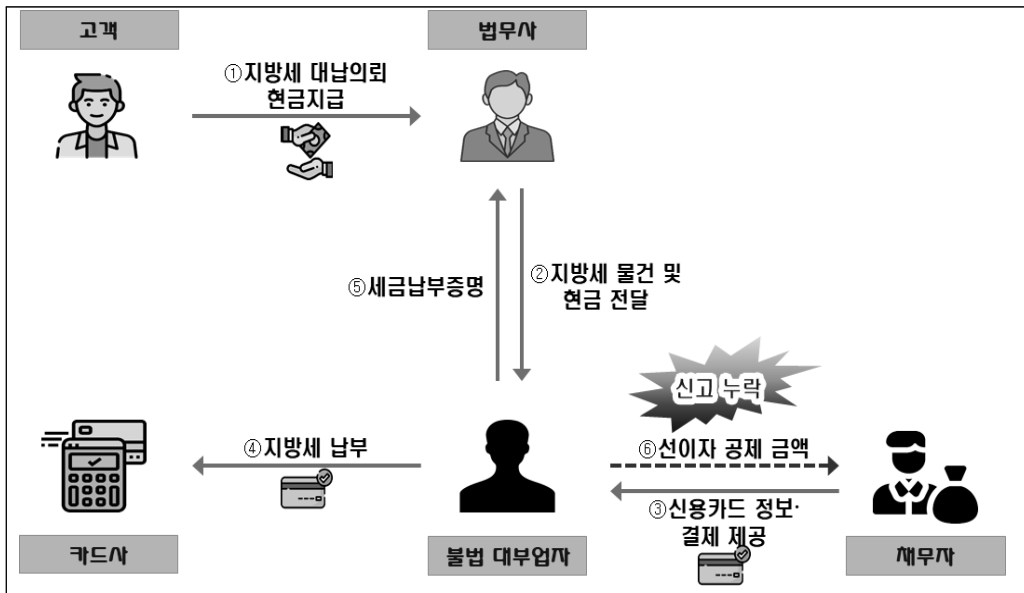
⇒ 매출누락, 이익분여,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



### 사례 5 (착수)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 법무사와 결탁하여 채무자의 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는 변칙 ‘카드깡대출’을 해주며 고리 선이자를 수취하고 신고 누락



#### □ 주요 탈루 혐의

- 대부업자 □□□은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뺀 금액만을 지급(일명 ‘카드깡대출’)하는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을 영위
    - \* 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 중 일부가 대부업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결제 진행
-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
  -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 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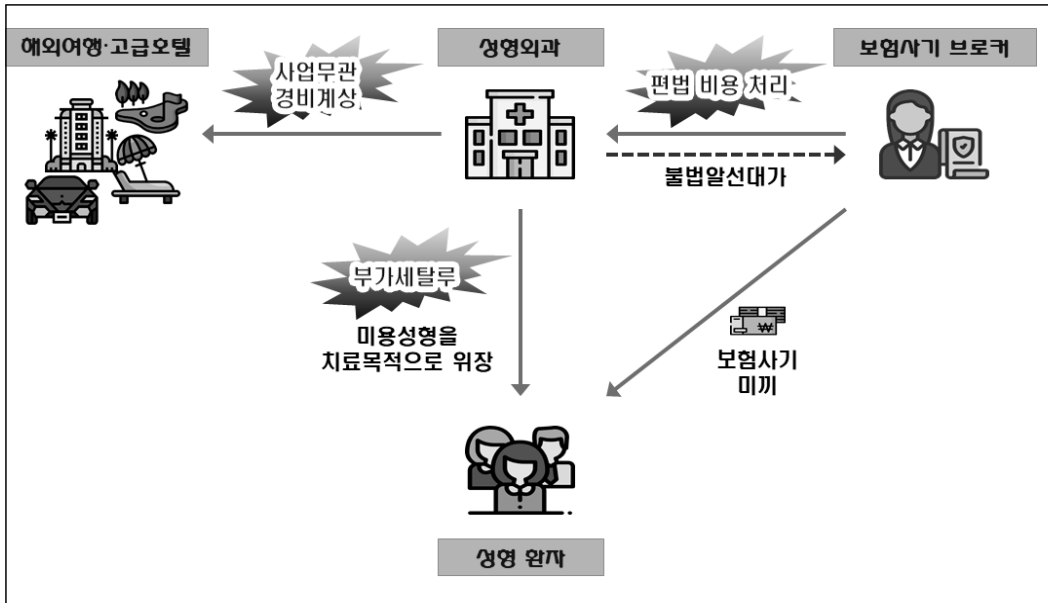
#### □ 조사 방향

⇒ 이자소득 신고누락 혐의 엄정 조사

사례 6  
(착수)

불법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성형외과

\*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성형수술 환자를 유인하여 치료수술로 변칙처리하고 세금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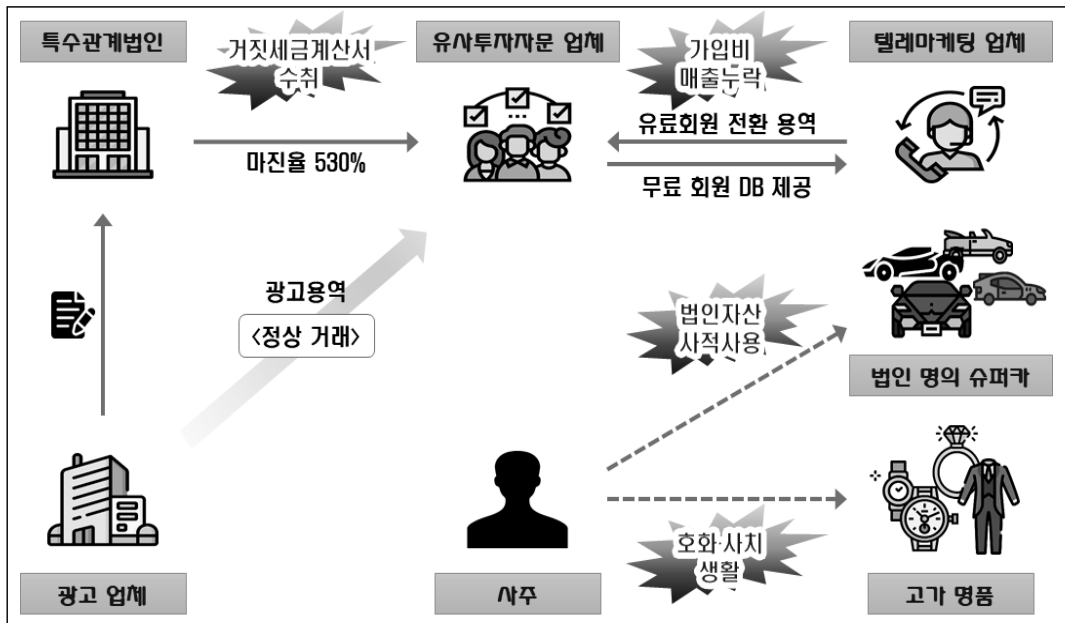
□ 주요 탈루 혐의

-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해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 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 처리
  - \*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보험료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소득 탈루
  - \* 병원 매출액의 약 30%를 브로커 조직에 알선비로 지급
- 또한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

□ 조사 방향

⇒ 과세매출 누락혐의 등 조사 및 브로커 조직까지 엄정 조사

<p>사례 7 (착수)</p>	<p>고수익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 주식 호황에 편승하여 고수익 정보 제공을 미끼로 고액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막대한 매출이 발생하자 가공매입을 통해 소득탈루</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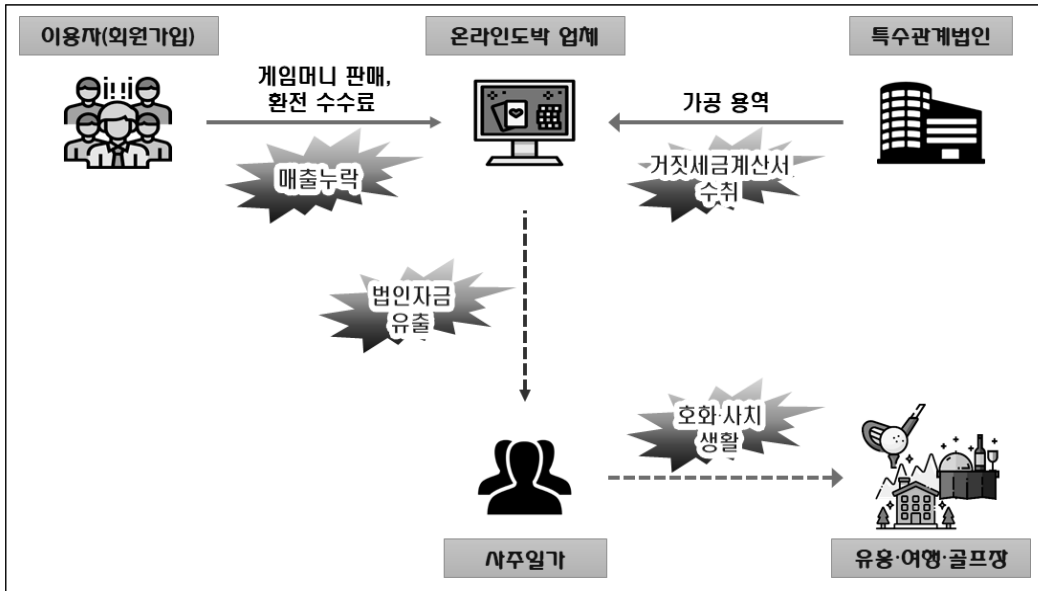
□ 주요 탈루 혐의

- 유사투자자문업체 □□□은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
-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천만 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 누락
-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탈루
- 또한,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방향

⇒ 매출 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p><b>사례 8</b> (착수)</p>	<p><b>청소년들까지 유인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자</b></p> <p><b>*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행심을 부추겨 얻은 막대한 판매·환전수수료 매출을 탈루하여 호화·사치생활</b></p>
-----------------------------	--



□ 주요 탈루 혐의

-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은
  - 최근 사업영역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면서 도박액 규모가 연간 약 400억 원에 이르고
  -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 (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또한, 사주 소유의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
  -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비용 처리

□ 조사 방향

⇒ 환전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업정 조사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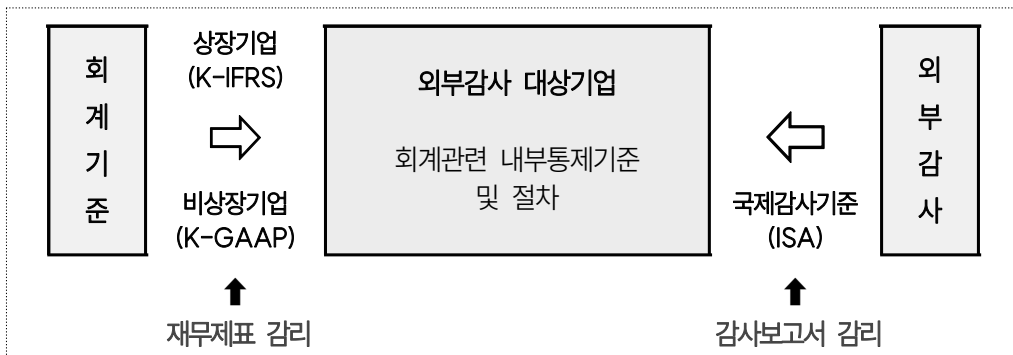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2022. 6

## 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 1 추진 배경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



- 회계감리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 새정부 국정과제 36.「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자본시장 투명성은 공시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시작되는데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의 IFRS 체계 하에서 감리는 기업들에게 회계처리방식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 \* 위반동기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 임직원 면직, 검찰 고발 등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조치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
  -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위반조치(경과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21년 기준)로, 제도도입('19.4월) 前 경조치 및 무혐의 건 등의 감리처리기간 171일('16~'18년 평균) 대비 대폭 축소
  - 대심제\* 등의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과 합리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 \* 감리위·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피조치자와 감리집행기관이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공방(攻防)
-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 제7차 임시 증선위('22.3.11) 의결사항 : ①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②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
- 이에 정부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

## 주요 내용

## 가.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하여,
-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최근 4년간('18~'21년)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 종결은 제외)

1년 이내:136건(61%), 1~2년:65건(29%), 2~3년:19건(8%), 3년 초과:5건(2%)

- (개선)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이 명문화됩니다.
-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 가능)
- \* 예)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 또한,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 ①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 (현행)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적발 시 퇴거)
- 기록 행위까지 제한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경찰청 사례(자기변호노트) :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내용, 행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고, 수사과정을 메모할 수 있는 공란이 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수검노트」를 마련·제공 할 예정

### ②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현행)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예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 \* 피조사자가 수행한 업무 관련 특정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
- \*\*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
-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 ③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현행)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 이메일, 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현행)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 피조치자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① 감리위 안전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② 또한, 감리위 안전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 \* 다만, 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치자 간 공모,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 조정



\*\* 과징금·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산정내역 및 근거, 감사인 지정기간 등 제시

#### ⑤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현행) 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문답과정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이 가능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선)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인은 감사조서 및 재무제표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고, 회사 관계자도 회사 자료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음

\*\* 외감규정 제24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는 법인 임직원에게 대한 조사과정 입회 요청 가능

### 3

#### 향후 계획

□ (규정 개정)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실무 관행 개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세부 과제별 목록>

구분	세부 과제	조치 필요사항
감리 수행 효율화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	시행세칙 개정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①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외감규정 개정
	②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외감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③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외감규정 개정 감리실무 개선
	④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실무 개선
	⑤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감리실무 개선